

시민정치운동과 연합정치를 위한 구상

1. 한국정치의 비전

□ 한국사회의 현주소

- 불안·절망·분노의 나락을 향하여 가라앉고 있는 한국사회
 -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·번영의 가치를 창조해낼 수 없는 사회
 - 단기적 이익을 좇아 개별화·파편화된 개인·집단들 간의 벌어지는 총체적 정글의 사회(경쟁의 사다리를 기어오르며 상대방을 탈락시키는 데 몰두하는 교육현실,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채 생계와 취업을 위해 영혼이 죽어가는 청년세대 등)
 - 용산참사는 절망과 분노의 늪 속에서 공멸의 쟁투를 벌이는 한국사회의 축소판

- 민주주의의 후퇴와 헌법의 말살
 - 민주적 대화와 토론 그리고 합의정신의 말살
 - 반칙과 특권의 횡행, 법치의 붕괴, 도덕성의 붕괴
 - 수수방관하는 시민사회·분노하지 않는 시민

- 대안부재의 사회
 - 시대를 역주행시키는 보수진영·권력과 이익의 정치만을 추구
 - 개혁진보진영 전체의 무기력한 패퇴상황 지속(질적 변화가 난망한 민주당, 자기중심적 배타적 정치노선에 갇혀있는 국민참여당, 정파적 편협성과 낮은 이념적 급진성에 사로잡혀 현실정치의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진보정당, 원론적·도덕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 외에 사회세력을 이끌어갈 정치능력을 결여한 시민운동진영)

□ 희망의 정치

-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 정치
 -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과 공평이 이룩되는 사회
 - 민주적 토론과 합의가 존중받는 사회

-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
 - 사회양극화와 그것을 심화시키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혁·사람중심 경제의 실현

-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와 안전이 제공되는 사회 · 모든 개인이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존을 지키고 창조(도전)의 열정을 발휘하는 사회

□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창조

○ 가치의 정치

- 정치선진화(정치발전)의 핵심지표
-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꿈과 이상 · 창조와 도전의 열정
-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천민정치에서 철학과 가치에 근거한 정치
- * 한국에서 진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‘뺑’과 ‘계급’을 넘어선 ‘가치’ · 한국사회의 대중은 가치가 출현할 때 진보에 열렬히 화답하고 가치가 소멸할 때 침묵하였음

○ 생활정치

- 시민들의 삶의 요구 · 삶의 질에 근거한 정치
- 소통과 연대, 분권과 자치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
- 새로운 위험사회에 대한 성찰적 인식과 도덕적 기반에 대한 성찰 위에서 제기되는 사회의제를 정치의 중심에 설정
- 생산자 ·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· 수요자 중심의 사회경제구조

○ 시민정치

-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참된 시민의식의 발현으로서 참여의 가치를 지향
- 시민들의 연합된 힘으로 정치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적극적 자유의 가치 실현
- * "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." (노무현)

□ 당면 실천과제

- 대중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운동세력의 재건
- 한국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구진보가 아닌 새로운 진보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문제제기

2. 시민정치운동의 의의와 필요성

□ 시민정치운동의 필요성

- 제도정치 · 정당정치의 도피

- 모든 대의민주주의체제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고 구조화된 직접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작동함.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제도정치·정당정치는 시민적 삶·시민적 주체성에서 단절·괴리되었음
-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도 근본적으로는 대중정치운동의 토대가 괴사되었기 때문에 발생함. 1970-80년대 재야운동, 1990-2000년대 한국사회 시민정치운동의 전통이 단절되고, 제도정치·정당정치와의 선순환구조 붕괴함.
- *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정치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봐야 공허한 구두선에 불과

o 정치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함.

- 시민 속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통해 소통하고 시민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

□ 시민정치운동의 방향과 과제

o 시민정치운동의 새로운 틀에 대한 창조적 문제의식이 필요함

- 정치사회-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 틀에 구속되지 않고 한국사회의 특수한 발전경로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그에 입각한 실천의 조직화가 필요함

o 새로운 시민사회-정치사회의 관계모형 모색

- 지금까지의 관계는 형식적 차원에서 정치사회-시민사회 이분법에 입각한 분리모델이었지만 내용적 차원에서는 시민사회운동이 정치에 개입해 달라는 상황적 압력에 끊임없이 직면해 오면서 역할과 인적 측면에서 서로 섞이는 관계
-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·낙선운동은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조건들의 발현으로서 '反정치의 정치' 모델이었음
- 탈정치·반정치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들이 시민사회운동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음. ex)2004년 '좋은 후보 당선운동'(?), 17대 대선시기 미래창조연대, 문국현을 통한 독자적 정치세력화 실험→시민사회운동진영이 일정한 신망과 영향력을 갖고는 있지만 기존 정치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, 기성 정치사회에 흡수되어 버리거나, 기성정치사회의 벽에 갇혀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.

o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적 위상과 가능성

- 기성정치세력들이 매우지 못하고 있는 대안부재의 공간이 존재함→시민사회운동을 기반으로 한 정치실험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배경
- 문국현 정치모델 실험의 시사점→새로운 진보정치를 갈망하는 10% 가량의 진보 유권자집단들의 존재를 시사함

* 문국현 그룹은 대선 과정과 그 후에도 진보개혁진영의 다른 세력들과 치킨게임을 하듯이 대립하였으며, 대중의 궁극적인 요구와는 철저히 다르게 독자노선을 고수함으로써 결국에는 내부 분열, 고립, 쇠락을 면할 수 없었음

o 시민정치운동의 새로운 모델 창출

- 시민운동진영은 스스로가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치적 대안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함

- 총선연대모델, 문국현모델, 미래창조연대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창조적 정치운동모델 창출 필요성

- 시민사회운동세력은 노선 및 정체성이 비슷한 (준)정치권의 다양한 그룹 및 전문가 그룹들과 적극적 결합 필요성

3. 연합정치의 의미와 방향

□ 연합정치란 무엇인가?

o 연합정치(coalition politics)는 일반적으로 ①선거승리와 안정적 정부의 구성, ②중요한 정책의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정당 및 정치세력끼리 연합하는 행위를 말함

- 연합정치는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갈등의 다양화, 비례대표제의 확산 등에 의해 다당제 체제가 일반화되면서 발달하였음

o 최근의 연합정치의 특징

- 소선거구-다당제체제라는 조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. 소선거구제는 선거연합의 향배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되게 함.

- 이탈리아에서는 1993년 완전비례대표제에 의한 기존의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(75%)-비례대표제(25%)로 바꾸면서 정당 간 선거연합이 더욱 가속화되었음. 진보적 올리브연합이 1996년 전후 최초로 정권획득

- 프랑스에서도 소선거구·결선투표제 도입 이후 인위적으로 다수를 조성해 내기 위한 선거연합(연합공천)이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짐.

- 일본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자민당연합 결성의 배경에는 1994년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-비례대표 병립제를 도입하는 것이 계기가 됨

※ 향후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하여 세계적 흐름이 대체로 소선거구제로 바뀌는 흐름이라는 것과 그것이 기성질서의 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주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선거구제는 외형상 지역주의와 다당제를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득권질서 현상유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큼

□ 한국의 연합정치 경험에 대한 비판적 고찰

○ 한국에서 연합정치의 태동 배경

- 민주화 이후 정치세력의 다극화와 소선거구제도의 도입으로 정치연합에 대한 모색
- 1990년 3당 합당, 1997년 DJP연합, 2002년 노무현-정몽준연합→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

○ 한국의 정치연합의 특징

- 3당 합당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채 밀실에서 권력지분협상을 통해 탄생한 반민주적 기득권연합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냄
- DJP연합은 3당 합당의 밀실험상 방식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양 정치세력 간의 결합을 천명하고 유권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음. DJP연합의 결과는 민주주의를 굴절시킨 면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기여. 하지만 DJP연합은 이데올로기적 인접성이나 정책적 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정권 및 관직배당을 직접적 목표로 하는 상층 엘리트 간의 협상에 의존하였음
- 노무현-정몽준연합 또한 절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DJP연합과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를 공유했음. 정몽준의 연합파기에도 불구하고 호남-충청-개혁세력 간의 아래로부터의 유권자연합이 작동했음.

○ 한국에서 연합정치의 시사점

- 선거연합의 여러 한계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선거연합을 구성한 측이 선거에서 승리하였음
- 선거연합은 계속 굴절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진화 또한 거듭해 오고 있음
- 선거연합(정치연합)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연합의 내용적 강화와 연합참여의 보상감이 균형감있게 조화되는 것이 핵심

□ 연합정치의 필요성

○ 한국의 정치발전에 대한 요구와 부합

- 연합정치의 활성화는 합의민주주의를 강화하여 토론과 협상의 정치문화를 촉진함
- 세부적으로는 ①국회의 자율성 제고, ②대통령제 본래의 기능인 삼권분립의 의미 강화, ③패권적 정당문화의 지양과 정당의 기능과 역할 증대

○ 진보개혁세력의 위기 극복에 기여

- 지난 시기 민주개혁세력의 분열과 파편화는 ‘민주주의적 실천의 부재’와 ‘정치역량의 부재’에서 기인.

* 미국 민주당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NAFTA체결과정에서 당내에 기업가에 가까운 그룹과 노동자에 가까운 그룹 사이의 갈등이 한국에 비해 결코 못지않았지만 당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았음

- 연합정치의 실천을 통해 진보개혁세력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게 협력하고 경쟁하는 방법을 터득

- 연합정치를 통해 현재의 정파적 편협성과 폐쇄적 현상유지 구조를 깨고 인적·물적·정치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냄으로써 내부 개혁과 쇄신의 동력 창출

○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당면 정세의 요청과 부합

- 진보개혁진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심력 부재에 의한 내홍을 치르게 될 것이 거의 명약관화

- 선거연합 불가피

□ 연합정치의 조건과 방향

○ 10.28재보선의 교훈: 안산 상록(을)을 중심으로

- 후보단일화 과정에 여러 정파 주체들의 문제점→①민주당은 소아적이고 협량한 태도, 리더십 부재의 문제점 노출, ②민주노동당·진보신당·임종인 후보는 민주적 절차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일탈적 태도 존재, ③시민사회단체는 중재 및 조정자로서의 정치력과 압력수단 부재의 문제점 노출

○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연합정치의 기본 방향

- 첫째, 연합정치 혹은 선거연합에 대한 협소한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여 장기적 구도와 포괄적 틀의 설계가 필요

- 둘째, 강력한 대중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기여해야 함. 상층엘리트 간의 막후협상 방식을 뛰어넘어 선거연합과 대중운동이 접맥되는 지점을 찾아야 함. 예)2002년 국민참여경선과 노무현 돌풍

- 셋째, 연합의 합당한 기준 마련. 정체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연합+상호보상과 동등성, 호혜성의 원칙→민주적 경쟁모델 설계

□ 연합정치의 실천 방안: 국민공천배심제의 활용

o 선거연합 실현의 기본 방법

-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선거연합의 방식·원칙에 대한 합의가능성 낮음
- 선거연합을 중재·조정하는 세력이 주도가 되어 제3의 지대에 강력한 흡수력을 지닌 정치무대를 만들 필요→그 같은 틀은 중재·조정·심판의 형식이지만, 내용적으로는 준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정치세력이 됨. 진보개혁진영의 기성 정당·정파들과 치킨게임을 피하면서도 독자적인 힘을 갖도록 설계된 틀.

o 국민공천배심제의 실험

- '국민공천배심제'는 상향식·하향식을 절충한 공천제도로서 '일반국민의 공천참여'와 '특정정파·계파의 이해를 배제'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
- 운영방안→①지방선거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는데, 국민들 가운데서 무작위로 추출. 단 진보개혁진영의 정체성을 고려해 非한나라당·非보수 유권자의 일정비율을 정함, ②중앙 배심원단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국민공천배심제를 실시할 전략지역의 선정, 그리고 심사대상후보의 압축을 주로 담당, ③국민공천배심원단은 서류심사, 면접, 후보 토론, 정견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사한 후 투표로 단수(간혹 복수)의 '좋은 후보'를 지명하여 각 정당에 공천을 추천 의뢰. 단 소위 '좋은 후보'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식견과 인품, 정견에 쏠려 나타나게 될 경우 실제적인 선거경쟁력이 도외시 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해 여론조사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향식 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. ④국민공천배심원단의 추천 결정은 물리적 강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·정치적 강제성을 가짐. 각 정당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추천 결정의 수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도록 함, ⑤국민공천배심원단의 결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운동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'좋은 후보'를 지원하기 위한 서포터스체제를 구축
- 국민공천배심제의 의의→①실질적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귀속, ②정파·정당을 초월해서 공천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인물을 발굴, ③과거 상향식 경선의 관객민주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, 책임성있는 심의와 숙고를 담아낼 수 있음, ④개별 정당에서도 채택할 수 있지만 선거연합모델에 더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음.

4. '희망과 대안' 활동과 관련한 몇 가지 고려사항

- 향후 연합정치의 기본 방향
- 시민정치운동과 연합정치의 양립 가능성 또는 보완적 성격
- 향후 시민정치운동의 기본 지침